

동바리 제거한 채 콘크리트 타설...공정 앞당기려다 사고

(지지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수사 진행 과정 공개

공정 쫓겨 36~38층 동바리 철거...“현장소장이 해체 지시” 진술도
수실통 달하는 7개 콘크리트 받침대 구조 계산도 하지 않고 설치
비용 아끼려고 공사 서두르고 지침 어겨...광주일보 보도 사실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늦어진 공정을 단축하려고 공사를 서두르고 비용을 아끼려다 기존 규정을 무시하면서 빚어진 사고라는 게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일보 보도(광주일보 1월 13일 1면, 1월 19일 6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부실 시공과 감리, 부당한 건설 관행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수사 브리핑을 갖고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때 설치해야 할 동바리(지지대)를 미리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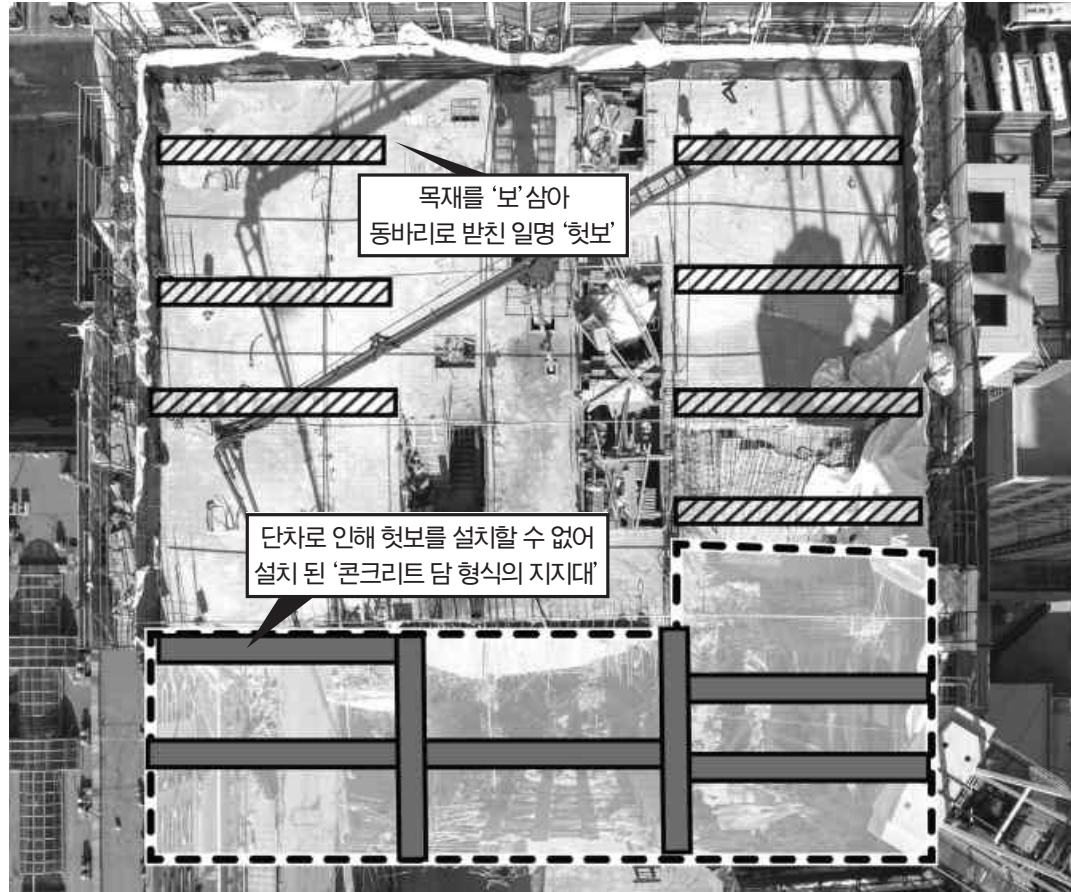
동바리의 경우 현행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에는 30층 이상 또는 지상 120m 이상 건물 신축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타설층 아래층부터 하부 3개 층을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설하기 전부터 3개 층 동바리를 미리 제거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동바리 설치 규정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자체 시공 지침에도 적시됐지만 무시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이같은 지시를 현대산업개발측 현장소장이 내린 사실도 하도급업체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은 계획보다 늦어진 공

을 앞당겨야 했고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하도급 업체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동바리를 철거했다가 다시 타설할 때 부담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같은 공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감리보고서에 적시(광주일보 1월 19일 6면) 된대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끝낼 계획을 세웠다가 1월 초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등 늦어지면서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층 내부에 동바리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창틀 조적(細積·벽돌 쌓기), 타일 작업 등의 공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정 속도를 서두르려는 시공사측 입장에서는 제거하는 게 유리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속도와 비용 절감만 중시한 건설업체의 성과주의가 빚어낸 참사라는 게 경찰 수사로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또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중을 견뎌낼 3개층 지지대를 미리 제거해버린 것 외에도 39-38층 사이 PIT층(배관 등 설비 층) 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꼼꼼한 구조 계산 없이 동바리 대신, 수실통 t 규모의 콘크리트 담장을 여러 개 만들어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한 점도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무너진 201동에



25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붕괴원인으로 꼽고 있는 콘크리트 담의 시공위자와, 붕괴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헛보'가 설치된 위치를 표시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점선안은 콘크리트 타설 후 붕괴된 바닥 슬래브(수평 널빤지) 구역

는 화단, 테라스, 야외 정원 등을 구성하기 위한 PIT층 내부 천장 높이가 0.55~1.5m까지 다양하게 설계됐다. 건설사측은 해당 규격에 맞는 동바리를 자체 제작하기도 어려워 지지대 역할을 할 콘크리

트 담장을 여러 개 만들어 하중을 떠받드는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인근 붕괴되지 않은 건물에는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강풍 인근 벽체에 생긴 미세 균열을 사전 징후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 붕괴와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애초 15cm 두께의 슬래브를 35cm 두께로 구형 승인없이 변경했다는 일부 주장도 설계변경 승인을 거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공사측과 하도급업체 간 거푸집 공법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구형 허락 없이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정확한 붕괴 원인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이 규정을 무시하거나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부실 감리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콘크리트 타설업체인 A업체 대표를 불법 재하도급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입건, 조사중이다.

붕괴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은 최근콘크리트하중업체인 A회사 직원들이 아닌 별도의 노무 약정서를 체결한 펌프차 장비 B업체 직원 8명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 진행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관계자들 실형

징역 1년 6개월~8년 선고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125명에게 71억원을 받아 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산동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사기와 배임증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7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49)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징역 2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로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C(49)씨에 대해서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125명에게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7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택, 군산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하고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중분양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또 자신들의 이중분양 사기행각

이 당시 조합장에게 발각되자 형사고발 등을 연기해달라는 청탁을 한 데 이어 조합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무 처리 경험에 없는 조합장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와 2억원 규모의 ‘2차 지역주택조합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B씨는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상당 금액을 유류비로 탕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본부장 D씨 등은 B씨 등과 공모해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신략 계좌가 아닌, B씨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분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지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중국인 검거

순천경찰은 25일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중국인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순천시 해룡면에

주거해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인 중국인 B(5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차량 안에서 불을 질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조돼 생명

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에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태의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병원 치료중인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 벌금형 감형...직위 유지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 아래 지원금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유죄”라면서도 “2018년 순천 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일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당연퇴직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편취금을 공탁한 점 등도 반영됐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상의 합평군수 검찰 송치

이상의 합평군수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4일 이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합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다섯 차례 맞춤 양복을 제작했으나 양복점에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아 결제가 늦어졌다”면서 “개인적인 불찰은 있지만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합평=한수영 기자 hsy@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